

한국의희망 강령

전 문

대한민국은 기적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2차대전 후 독립국 가운데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깃발을 들고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세계가 열광하는 K-신드롬을 만들어낸 문화강국이기도 합니다.

2023년 오늘,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대한민국은 추격국가로서 최고의 단계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선도국가로 건너가야 합니다. 그러나 극심한 정치갈등, 사회분열, 포퓰리즘, 부정부패가 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건너갈 때를 놓친 국가는 예외 없이 쇠락했습니다. 물질적 진보에 맞는 정치적 진보를 이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정치활동의 중심은 정당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당은 실력도, 비전도, 품격도, 염치도 없이 권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모습을 바꿔가며 정치를 망치고, 민생을 해치며 미래를 발목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희망>은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담아 새로운 정당의 모습으로 미래를 위한 정치를 추구하겠습니다.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과학 정치로, 생활 정치로 바꾸겠습니다. 다음 10가지 비전과 함께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더 큰 미래로, 다음 시대로 건너가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건너가자!” 9가지 약속

1. 체계적·상시적·선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오늘의 정치인을 교육하고 내일의 정치인을 육성하겠습니다.
2. 첨단기술 기반의 운영시스템으로 당원, 공천, 정책, 자금 등을 투명하고 관리하고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겠습니다.

3. 국회의원의 특권적 지위와 혜택, 지원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사회적 특권을 타파해나가겠습니다.
4. 삶을 과학화하고 철학화하겠습니다. 선도국가의 높이에 맞게 국민 생각의 수준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5. 과학기술 보국을 국정 중심에 두고 민·관·학·정·산의 협력을 도모하며 기술진흥, 산업육성, 정책개발, 인재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6. 당리와 당략이 아닌 국민 행복과 국가 미래를 중심에 두고 상생과 협력 및 대화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7. 낡은 이념과 진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 우선·해결 중심의 실용적 사고를 하겠습니다.
8. 미래세대가 창의적으로 꿈을 키우고 꿈을 이룰 수 있는 학교와 교육 및 입시 제도를 개발하겠습니다.
9. 모든 세대가 소외되지 않는 지속적 복지제도를 구축해 사회적 통합과 계층 간 통합을 이루도록 힘쓰겠습니다. <끝>

당 헌

제1장 총칙

제2장 당원

제3장 당 기구

- 제1절 전당대회
- 제2절 전국위원회
- 제3절 상임전국위원회
- 제4절 상임대표, 공동대표 및 최고위원
- 제5절 최고위원회의
- 제6절 당무집행기구
- 제7절 윤리위원회
- 제8절 당무감사위원회
- 제9절 청년위원회
- 제10절 상설위원회
- 제11절 특별위원회 등
- 제12절 정치학교
- 제13절 정책연구소
- 제14절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제4장 원내기구

- 제15절 의원총회
- 제16절 원내대표
- 제17절 정책위원회

제5장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제6장 공직후보자추천기구

제7장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8장 회계

제9장 당헌개정

제10장 보칙

당 헌

제1 장 총칙

제1조(명칭) 당의 명칭은 한국의희망이라 한다.

제2조(목적) 한국의희망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준수하며, 인간존중의 정신, 자유와 평등의 동등한 가치, 그리고 국민이 행복할 권리를 기본권의 중심에 둔다. 대한민국이 세계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속적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규약을 준수하고 평화, 안전, 질서, 번영이라는 국제사회의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정치학교를 설립해 국가 경영 역량을 갖춘 지도자를 교육시켜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봉사하게 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블록체인플랫폼 정당으로서 당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대한민국이 투명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추동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희망이 지향하는 정신과 가치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출해 당이 추구하는 방향의 결정과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의희망은 지방분권을 통해 재화와 기회, 문화생활이 골고루 접근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며,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다 함께 기여하고 혜택을 받아 삶의 질이 골고루 향유되는 사회를 지향한다. 한국의희망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아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대내외적 노력을 기울이고,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며 책임을 다하는 정당이 될 것을 선언한다.

제3조(구성) ① 한국의 희망은 중앙당,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다만, 각급 공직 선거 시 당해 선거구에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당은 수도에, 시·도당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 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제2장 당원

제4조(요건) ① 정당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입당·탈당의 요건과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제5조(당원) ①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당원의 의무를 다한 자를 당원으로 한다.

② 당원에 관한 필요한 기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권리 및 의무) ①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5.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6. 각 위원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7.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②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당규를 지킬 의무
2.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무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5. 소정의 당비를 납부할 의무
6.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윤리교육 포함)을 받을 의무

③ 국가주요정책, 입법안 및 각종 국회 상정의안 등에 관한 당론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필요시 당원 대상 여론조사 등 당원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④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 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⑤ 각종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임명 또는 추천함에 있어서 유권자수에 비례 하여 지역, 여성 및 청년당원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양성평등을 위하여 어느 한 성별이 60%를 초과하여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대통령의 당직 겸임금지)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동안에는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제8조(당과 대통령의 관계) ①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②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한다.

제9조 (당 소속 시·도지사와의 당정협의를) 당 소속 시·도지사는 최고위원회의의 요청에 의해 당의 주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0조(당비 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① 당비 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정한 각종 당직 선임 및 공직후보자 추천과 그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② 최고위원회 결의로 당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가입과 동시에 선거권, 피선거권 및 당원의 제반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 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 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자로서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⑤ 당비의 납부기준금액과 납부절차, 당비 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조(상벌) ①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②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제3장 당기구

제1절 전당대회

제12조(구성) ① 전당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그 정수는 1,000인 이내로 하고,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상임대표, 공동대표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포함)
3. 고문단
4. 당 소속 시·도지사
5. 당 소속 국회의원
6. 지역위원회 위원장
7. 후원회원
8. 사무처당직자
9.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10. 당 소속 시·도의회 의원
11. 당 소속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

② 전당대회 대의원 결원 시 선임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조(기능) ① 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강령의 채택과 개정
2. 당헌의 채택 및 개정
3.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
4.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 최고위원의 지명
5. 대통령후보자의 지명
6. 기타 주요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제14조(소집) ① 정기전당대회는 2년마다 전당대회이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기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시전당대회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전당대회 소집은 전당대회이장이 전당대회 개최일전 5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④ 전당대회의 의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조(임원) ① 전당대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전당대회 의장은 전국위원회 의장이, 전당대회 부의장은 전국위원회 부의장이 된다.

제16조(의결정족수) 전당대회는 이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전당대회 준비위원회) ① 전당대회를 원만하게 개최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전국위원회

제18조(구성) 전당대회의 수임사항과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국위원회를 두며, 그 정수는 50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상임대표, 공동대표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포함)

3. 당 소속 국회부의장
4. 전당대회 의장·부의장
5. 고문단
6. 사무총장
7. 시·도당 위원장
8. 당 소속 시·도지사
9. 중앙당 각종 위원회 위원장
10. 당 소속 국회의원
11. 지역위원회 위원장
12. 시·도의회 의장
13.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14.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1급 당직자
1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16. 당 소속 자치구·시·군 의회 의장
17. 후원회 임원
18. 시·도당 선출 전국위원
19. 청년위원회에서 선출한 전국위원
20. 여성위원회에서 선출한 전국위원
21. 노인위원회에서 선출한 전국위원
22. 장애인위원회에서 선출한 전국위원
23. 정치학교 교장 및 임원
24. 정책연구소 소장 및 임원
25. 직능과 계층을 고려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선임한 전국위원 20인

제19조(기능) ① 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기본정책의 채택과 개정
 2. 전당대회가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
 3.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기능의 대행
 4. 최고위원 결위 시 최고위원 선출.
 5. 전당대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6.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 ② 전국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0조(소집 및 의사) ① 전국위원회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국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전국위원회의 소집은 전국위원회 의장이 개최일전 3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 ③ 전국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제21조(의장단) 전국위원회 의장은 전국위원 중 상임대표가 담당하고, 부의장 2인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절 상임전국위원회

제22조(구성) ①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100인 이내로 구성되는 상임전국위원회를 둔다.

- ②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전국위원회 의장·부의장으로 한다.
- ③ 상임전국위원회 위원은 전국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전국위원회 의장·부의장
2.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3. 시·도당 위원장
4. 국회의원
5.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선임 상임전국위원
6.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 청년 상임전국위원 5인
7.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 여성 상임전국위원 5인
8.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 노인 상임전국위원 5인
9.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 장애인 상임전국위원 5인
10.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11.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전국 대표의원

제23조(기능) ① 상임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강령·기본정책·당헌안의 심의 및 작성
2. 당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
3. 임시전당대회 소집 요구
4. 전국위원회 소집 요구
5. 전국위원회가 회부하는 안건의 의결
6.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이 당헌·당규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7. 당헌·당규·윤리규칙·윤리강령의 최종적 유권해석
8. 구체적 사안에 대한 당헌·당규·윤리규칙·윤리강령 적용의 당무에 관한 최종적 판단

9.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보고 청취 및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과 최고위원회의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처리

② 상임전국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4조(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상임전국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월 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및 긴급 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의장이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정족수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제4절 상임대표, 공동대표 및 최고위원

제25조(지위와 권한) ① 상임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하며 최고 의사결정권자이고, 공동대표는 상임대표를 보좌하며 상임대표의 위임에 따라 사무처를 관장한다.

② 상임 대표는 당내 소통확대 및 원활한 당무수행을 위하여 정례적으로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한다.

1. 최고위원회의

2. 중앙당 주요당직자, 각종 위원회 위원장 및 정치학교 교장, 정책연구소 소장이 참석하는 확대당직자회의

3. 상임대표등 중앙당 주요당직자가 참석하는 원외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회의

③ 상임 대표는 원활한 당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당직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특별위원회 구성 시 최고위원회의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상임 대표는 당직자 인사에 관하여 임면권 및 추천권을 가진다.

⑤ 상임 대표의 권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6조(상임대표의 선출) ① 상임대표는 상임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 다만, 최다득표한 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은 경우에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②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1인이거나 선거기간 중 중도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상임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자를 상임대표로 지명할 수 있다.

③ 상임대표의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상임대표 선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1. 꺾워된 상임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공동대표가 그 직을 승계한다. 다만, 공동대표 유고시에는 새로운 대표 선출시 까지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승계한다.
2. 꺾워된 상임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꺾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선출된 상임대표를 지명하여야 한다.
-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⑤ 결선투표에서 결선투표대상자 중 1인의 후보자 사퇴, 사망 등의 사유로 결선투표대상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잔존 1인을 상임대표 당선인으로 한다.

제27조(선출직 최고위원) ① 공동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1위 득표자를 공동대표 당선인으로, 2위 내지 5위의 득표자를 최고위원 당선인으로 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

②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의 후보자가 4명 미만일 경우, 잔여 정원은 전국위원회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③ 선출직 최고위원이 꺾워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여성최고위원) ① 5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5위 득표자 대신 여성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 다만, 여성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1인이거나 선거기간 중 중도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상임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회의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자를 여성최고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② 여성최고위원 선거의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전국위원회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③ 여성최고위원이 꺾워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여성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청년최고위원) ① 5위 득표자 이내에 청년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5위 득표자 대신 청년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 다만, 청년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1인이거나 선거기간 중 중도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상임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회의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자를 청년최고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② 5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 청년 당선인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4위 득표자 대신 여성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5위 득표자 대신 청년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

③ 청년최고위원 선거의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④ 청년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청년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선거인단 구성 등 위임) 상임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인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타 필요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1조 (동일 득표자 처리특례) ① 상임대표, 공동대표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선거에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한 처리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선거에서 동일득표자의 순위를 정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여성 및 청년최고위원 후보중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한 처리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2조(임기) 상임대표, 공동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3조(권한대행) ① 상임대표가 궐위된 경우 상임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공동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권한을 대행할 공동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이 대행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권한대행을 할 자가 없을 경우 상임전국위원회 선임부의장은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여 권한대행자를 선출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선출된 권한대행자는 임시전당대회를 30일 내에 소집하여 상임대표, 공동대표, 최고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임시전당대회 소집 및 통상의 업무만을 할 수 있다.

제34조(자문 및 보좌기관) ① 당무에 관한 대표의 자문기관으로 당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상임대표가 고문단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상임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표가 임명하는 비서실장과 특별보좌역을 둘 수 있다.

③ 상임대표의 자문 및 보좌기관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 최고위원회의

제35조(구성) ① 당무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기관으로서 당무를 통할·조정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를 둔다.

② 최고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상임대표
 2. 공동대표
 3. 최고위원 4인
 4. 상임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 2인
 5. 원내대표
 6. 정책위원회 의장
- ③ 최고위원회의의 의장은 상임대표로 한다.

제36조(기능) 최고위원회의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소집 요구
2. 의원총회 소집 요구
3. 사무총장 등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요하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
4. 공천관리위원장 등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당직자 임면에 대한 의결
5. 국회의원후보자 등 공직후보자의 의결
6. 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감사에 대한 의결
7. 전국위원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8.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9.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제37조(소집 및 의사) ① 최고위원회의는 주1회 의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최고위원회의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8조(의결정족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제62조를 준용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상임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제6절 당무집행기구

제39조(구성)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사무처, 시,도당에 시,도당 사무처를 둔다.

제40조(당무집행기구) ① 중앙사무처에 당의 전략·조직·홍보·인사·재정을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전략기획부총장, 기획조정국장, 홍보국장, 조직국장, 정책국장, 총무국장을 두고, 상임대표 직속을 두고 대변인을 두며, 세부업무 범위는 당규로 정한다.

② 사무총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전략기획부총장, 기획조정국장, 홍보국장, 조직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사무처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부서를 둘 수 있다.

제41조(임명) 사무총장, 전략기획부총장, 기획조정국장, 홍보국장, 조직국장, 정책국장, 총무국장 및 대변인은 상임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42조(당직자인사위원회) ① 당무집행기구, 원내대책위원회 및 정치학교, 정책연구소 산하 당직자에 대한 인사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무처당직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사무처당직자는 사무처당직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후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③ 사무처당직자 인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과 부서별 기능, 복무 및 사무처당직자 임면절차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절 윤리위원회

제43조(구성) ① 당의 윤리의식 강화와 기강 유지 및 기풍 진작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상임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 외 인사로 한다.

③ 윤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상임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윤리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4조(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윤리강령, 윤리규칙 등의 심의 및 제·개정
2. 감사위원회에 중대한 윤리 사안에 관한 조사 요구
3. 감사위원회가 종결한 사안에 대한 재심사 요구
4. 감사위원회가 재심사를 거부하거나 당무감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징계안건 직접 회부 및 심의·의결
5.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의결
6.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각급 당 기구에 대한 표창의 심의·의결
7. 당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당원이 아닌 사람과 기관에 대한 감사장 수여의 심의·의결
8. 기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인사 사항

제8절 당무감사위원회

제45조(구성) ① 당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임대표 직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상임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 인사로 한다.

③ 감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상임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6조(기능) 당무감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광역 및 기초단체장, 각종 상설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주요 당직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정치학교, 정책연구소 임·직원의 당헌·당규 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비리·비위 등 부정사건 조사 및 자료관리

2. 조사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회부

3. 최고위원회의 또는 중앙윤리위원회 및 시·도당윤리위원회가 요구한 중대한 윤리 사안에 대한 조사

4.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당무감사

5.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정치학교, 정책연구소 임·직원에 대한 직무감찰

6. 기타 당무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조사

제9절 청년위원회

제47조(청년위원회) ① 청년 당원의 당내 원활한 소통과 의견개진을 위하여 독립적인 청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절 상설위원회

제48조(상설위원회) ①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1. 여성위원회

2. 노인위원회

3. 장애인위원회

②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절 특별위원회 등

제49조(특별위원회 등) ① 상임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기구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절 정치학교

제50조(정치학교) ① 당원의 정치역량 함양과 시민정치교육을 위하여 정치학교를 설치한다.

② 정치학교에 교장 1인과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③ 정치학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절 정책연구소

제51조(정책연구소) ① 정책의 개발·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정책 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정책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4절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제52조(시·도당대회 구성) ①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시·도당대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지역유권자수의 0.05% 이내로 구성하고, 그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시·도당 운영위원
3. 당 소속 시·도지사
4. 관할 당 소속 국회의원
5.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6.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7.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8. 당 소속 시·도, 지역위원회 및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
9. 시·도당이 선임하는 당원
10. 지역별로 선출된 직능대표

11. 지역위원회에서 선임한 당원

② 시도당회의의 대의원 정수 및 선출방식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3조(시·도당대회)의 기능) ① 시·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전국위원 선출
 2. 시·도당 위원장 선출
 3. 공직후보자(시·도지사 후보자)의 지명
 4. 중앙당에 대한 각종 건의
 5. 기타 시·도당의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 ② 시·도당의 수임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당 소속 시·도지사
 3. 당 소속 국회의원
 4.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5. 지역대표 전국위원
 6.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7. 시·도당 각종 상설위원회 위원장
 8. 시·도당 부장급 이상 사무처당직자
 9.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10. 당 소속 시도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
- ③ 시·도당대회 및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4조(시·도당위원장) ① 시·도당에 위원장 1인과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 약간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정기 전당대회가 개최되는 해에는 정기 전당대회 이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당대회의 연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기한을 정하여 시도당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당 부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시도당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5조(지역위원회) ① 시, 도당 아래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역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장을 둔다.

③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들을 소집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위원회의 활성화와 위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위원회 운영 위원장 협의회를 둔다.

⑤ 지역위원회의 운영·구성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원내기구

제15절 의원총회

제56조(구성) 원내 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총회를 둔다.

제57조(의원의 의무와 지위) ①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이 부여한 직무와 선서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당의 정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당의 모든 기구는 의원이 그 의무를 다하도록 그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58조(기능) ① 의원총회는 의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② 의원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원내대표의 선출
 2. 국회의장단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
 3. 국회대책 및 원내전략의 결정
 4. 국가 주요정책 및 주요법안의 심의
 5. 국회제출 법안 및 의안 중 주요쟁점사안의 심의·의결
 6. 당무에 관한 의견 개진 및 보고 청취
 7.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8. 기타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사항과 최고위원회의가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 ③ 국회의장·부의장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9조(의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다.

1. 원내수석부대표
2. 원내부대표 중 1인

제60조(소집) ① 의원총회는 월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원총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 ②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요청이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소집 목적과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최소한 48시간 전에 소속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의장은 소속 의원들의 요청 시 원내상황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제61조(회의) ① 의원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또는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의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③ 의원은 안건을 추가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관련분야 의견수렴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토론, 패널토론, 청문회 등 다양한 토론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62조(의결정족수) ① 의원총회의 의결은 거수 혹은 기립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비밀 투표로 의결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의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되, 야간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재적의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는 특별 안건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당론변경, 헌법개정, 대통령탄핵,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의결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회의체에서 당연 제척된다.
- ⑤ 당헌상 달리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항을 준용한다.

제63조(양심에 따른 투표의 자유) ① 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

- ②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당론에 대하여 의원이 국회에서 그와는 반대되는 투표를 했을 경우에 의원총회는 의결로서 그에 대한 소명을 들을 수 있다.
- ③ 생명, 윤리, 종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당론을 정하지 아니한다.

제16절 원내대표

제64조(지위)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 대표로서 국회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

제65조(선출 및 임기)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6조(권한) ① 원내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위원회의 주재
2.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배정
3.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추천과 임명
4. 기타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제1항 제2호의 권한행사시에는 상임대표의 의견을 들어 배정한다.

제67조(원내부대표등) ①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 부대표를 둔다.

②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추천과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③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 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절 정책위원회

제68조(구성) ① 당 정책의 입안, 심의 및 현안대처 기관으로서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에 정책위원회 의장과 부의장,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정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 정책위원회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부서를 둔다.

⑤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고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69조(기능)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정책의 연구·심의 및 입안
2.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
3. 법률안, 대통령령안, 예산안,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에 대한 당·정 정책협의 또는 검토 업무
4. 의원입법안의 연구 및 심의
5. 당 정책에 관한 자문사항의 심의
6. 주요 사회단체의 정책현안 수렴 및 정책 연계활동 등 당내·외 여론수렴을 통한 정책 개발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대외홍보

② 정책위원회에서 심의된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제1항 제3호의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정책위원회 의장 등) ① 정책위원회는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정책위원회 의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정책위원회의 주재
2. 당 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3. 당정협의업무 총괄·조정
4. 정책위원회 부의장 및 위원의 추천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 임명한다. 의원총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책위원회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정책위원회 의장은 약간인의 부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의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으로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⑥ 정책위원회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장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제71조(후보자 선출) ① 대통령후보자는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결과와 여론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선출한다.

② 대통령후보자당선자는 대통령 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 100%를 반영하여 산정한 최종집계결과 최다득표자로 한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1인이거나 선거기간 중 중도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

③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며, 여론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일정과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④ 제2항의 본문에 의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중 다수득표자를 후보자로 지명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후보자로 지명한다.

⑥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2조(대통령 선거인단 구성등) ①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통령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전당대회 대의원 선거인
 2. 전당대회 대의원이 아닌 당원 선거인
- ② 대통령 선거인단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3조(후보자의 자격) ① 대통령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6개월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제74조(후보자의 선출시기)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2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된 대통령후보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제) ① 대통령선거 240일전부터 출마 희망자를 위한 대선예비후보자등록제를 운영한다.

② 대선예비후보자의 등록 요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6조(후보자의 지위)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제77조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에 대한 특례) 제4장(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단, 대통령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상임대표·최고위원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6장 공직후보자추천기구

제78조(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상임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 3분의 2 이상은 당외 인사로 한다. 다만, 최고위원은 지역구 공천관리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공천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상임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④ 공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까지 구성한다.
- ⑤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하며, 최고 위원회는 공직후보자 추천에 대한 재의결권을 가진다.
- ⑥ 제5항의 최고위원회의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직후보자 추천안을 재의결한 경우 최고위원회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⑦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대한 공모
 2.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심사 또는 선정
 3. 우선추천지역 선정
- ⑧ 공천관리위원회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⑨ 공천관리위원회는 필요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평가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후보자를 압축 또는 추천할 수 있다. 평가시스템의 세부적인 사항은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79조(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위원회)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공천위원회(이하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상임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 3분의 2 이상은 당외 인사로 한다. 다만, 최고위원 및 지역구 공천관리위원은 비례대표 공천위원을 겸할수 없다.
- ③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상임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④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까지 구성한다.
- ⑤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하며, 최고위원회의는 공직후보자 추천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가진다.
- ⑥ 제5항의 최고위원회의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공천위원회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직후보자 추천안을 재의결한 경우 최고위원회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⑦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대한 공모
 2.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심사 또는 선정
- ⑧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0조(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기구) ①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 도당에 각각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와 비례대표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상임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를 포함)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 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최고위원은 공천관리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상임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시,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를 포함)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시·도당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 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④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시,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를 포함)가 심사한 사항은 시, 도당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한다. 다만, 각각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최고위원회의는 재의 요구권을 가진다.

⑤ 제4항의 최고위원회의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직후보자 추천안을 재의결한 경우 최고위원회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⑥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다만, 시, 도당 비례대표공천위원회는 제1호, 제2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 소속 각종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모
2. 당 소속 각종 공직후보자에 대한 심사 또는 선정
3. 우선추천지역 선정

⑦ 지방선거 공직후보자추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81조(후보자 추천)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은 경선 등을 통한 추천을 원칙으로 하며 당헌 제6장의 「공직후보자의 추천기구」가 수행한다.

제82조(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추천) 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후보자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추천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당내경선

2. 단수 후보자 추천

3. 우선추천제도를 통한 후보자 추천

③ 공천관리위원회는 추천안 마련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윤리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등 당 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당 기구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 제2호의 단수후보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천 신청자가 1인인 경우

2. 복수의 후보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후보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하여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3. 복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3조(국회의원 선거 우선추천제도) ①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는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거나 유권자 대비 당원 비율이 현저히 낮은 지역

2. 반복적인 국회의원선거 패배로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지역

3. 현역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와 국회의원선거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심사를 통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지역

4. 공천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③ 우선추천지역의 후보자는 정치적 소수자 및 당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로 한다.

④ 공천관리위원회는 우선추천 대상지역의 선정 및 후보자 추천 사유를 첨부하여 국회의원선거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여부 심사에 회부한다.

⑤ 우선추천제도를 통한 공직후보자 추천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전체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우선추천지역 선정 기준 등 우선추천제도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4조(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위원회(이하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추천한다.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은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등의 국민 대표성 및 전문성, 당 기여도 등을 고려하고, 여성을 50% 이상 포함하여 성별 교차식으로 한다.

- ③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비례대표 공천신청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신청자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 ④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위원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다.
- ⑤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공천 신청자에 대해 부적격 여부 등 심사를 실시한다.
- ⑥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압축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심사를 통해 추천후보자와 순번을 결정한다.
- ⑦ 공천 신청자의 부적격 기준 등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5조(시·도지사 후보자의 추천) ① 시·도지사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경선 등을 통해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상임대표가 추천한다. 다만, 경선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후보자는 시·도지사 선거인단의 투표로 선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후보자의 선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후보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6조(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 ①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는 시,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경선 등을 통해 선정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상임대표가 추천한다. 다만, 시, 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 ② 지역구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경선 등을 통해 선정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상임대표가 추천한다.
- ③ 비례대표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는 해당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시·도당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의 심사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상임대표가 추천한다. 다만,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후보에 여성이 50%이상 포함 되도록 하며, 순위의 매 출수에는 여성을 추천한다.
- ④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후보자의 추천방식 및 후보자 자격 심사와 관련하여 관할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은 후보자 선정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면접 또는 여론조사를 통하여 단수 또는 압축된 후보자를 추천한다.
- ⑥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압축된 복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한다. 다만, 경선은 시,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경선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⑦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 후보자 선출 및 추천 등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7조(지방선거 우선 추천지역의 선정 등) ① 각종 공직선거(지역구)에 있어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우선추천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2.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추천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3. 기타 공천관리위원회가 선거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한 지역
- ③ 우선추천지역의 선정은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고,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는 시, 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 ④ 우선추천지역의 선정과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8조(재·보궐 선거에 대한 특례) ① 각종 재·보궐선거를 위한 공직후보자는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장 회계

제89조(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제90조(예산결산위원회) ① 당 운영자금 감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의 매 분기마다 당내 및 당외 각 1회의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최고위원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제9장 당헌개정

제91조(개정발의) 당헌의 개정 발의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한다.

제92조(의결절차) ① 당헌개정안은 상임대표가 전당대회 또는 전국위원회 개최 일전 3일까지 공고한다.

② 당헌개정은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위원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국위원회가 당헌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93조(개정 당헌의 공포) 전당대회 또는 전국위원회를 통해 당헌이 개정될 때에는 상임대표는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94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당대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상임전국위원회가 설치한 수입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③ 합당과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5조(법정 부채과 인장의 인계) ① 중앙당과 시·도당의 대표자 변경,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 도당은 시도당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부채과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법정부채과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6조(선거대책 기구의 지위등) ① 대통령후보자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한다.

② 대통령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대책기구의 구성, 운영 및 선거재정 등 선거업무 전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다.

③ 대통령선거대책기구의 장은 대통령선거일까지 당무전반을 통할·조정한다.

④ 선거대책기구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7조(후보자 예비심사 컷오프제도 도입) 당 대통령후보자, 상임대표 및 최고위원, 당 공직후보자 선출 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고 당선자의 대표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후보자 예비심사(컷오프)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제98조(비대면 투표 및 의결특례) 각급 회의체 의장은 당이 실시하는 모든 선거의 투표와 당의 모든 대의기관 및 각급 회의 의결에 관해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급 윤리위원회의 의결은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없다.

1. ARS 투표
2. 모바일 투표
3.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한 의결
4.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

제99조 (비대면 회의체 특례) 각급 회의체 의장은 당이 실시하는 당의 모든 대의기관 및 각급 회의에 관해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급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없다.

1. 실시간 영상송출
2. 순차적 전화통화 방식
3.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
4.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

제100조(시·도당 승인의 취소)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는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소사유와 절차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창당 전당대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특례) ① 창당 전당대회에 한하여 상임대표, 원내 대표, 최고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② 창당준비위원회는 상임대표, 원내 대표, 최고위원을 추천하고 창당 전당대회의 추대로 그 임기를 시작한다.